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18.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 2017. 3. 21. 인천○○공사 ○○○○○장 으로부터 ‘2016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명단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4.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위반을 사유로 택시운전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2017. 5. 18. 사전처분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택시운전 자격정지 3일(2017. 6. 12. ~ 6.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동료가 10년 무사고이고 주민등록 끝자리가 홀수면 교육이 면제라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자 교육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한 바,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어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이 억울하고, 이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인천광역시○○○○운송조합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

거 청구인은 2015. 8. 14. 별점15점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행위가 있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운수종사자에 해당되며, 인천○○공사 ○○○○○장으로부터 ‘2016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명단 통보됨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전처분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택시운전 자격정지 3일의 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 3], 제59조[별표 5]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 2017. 3. 21. 인천○○공사 ○○○○○장으로부터 ‘2016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피청구인에게 명단이 통보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7. 4.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위반을 사유로 택시운전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5.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자격정지 3일(2017. 6. 12. ~ 6. 1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 4의 3]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8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별표 5]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관할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은 2015. 8. 14. 별점15점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행위가 있어 무사고·무별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7. 3. 21. 인천○○공사 ○○○○○장으로부터 ‘2016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피청구인에게 명단이 통보된바, 청구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위법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운송사업조합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인천○○○○○○에 2016. 1. 16. 통보한 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3,456명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주의의무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서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